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반대한다

관련 기사 3면

프랑스·영국 노동자들처럼 싸워야 한다

관련 기사 4~5면



오직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만 발행하는

노동자 연대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노동자 연대> 신문이 윤석열 퇴진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정기 후원 신청

윤석열의 이재명 수사

정적을 확증도 없이 범죄자로 몰아가기일 뿐이다

검찰과 법원이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최측근을 두 명이나 구속했지만, 지난 석 달 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다.

솔한 검찰발 '단독 보도'들은 대부분 대장동 비리 주범 중 유동규·남욱이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말이 '근거'다. 정권이 바뀌고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되자, 유동규·남욱은 정권에 유리하게 진술을 바꿨다.

덕분에 그들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석방됐다. 김용·정진상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반면, 주범인 김만배는 유동규·남욱의 진술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피의자들의 진술들이 서로 모순되는데도 우파 언론과 여권은 이재명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한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니 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월 28일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및 위례 사업 등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하나만 걸러라

검찰은 수사팀 교체 반년 만에 이재명의 배임 혐의를 꺼내들었다. 대장동 개발에서 너무 많은 수익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간 게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적 판단 문제를 (입증도 하지 않고)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는 셈이다.

검찰은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의 사전 공모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

동안 검찰이 수사를 회피해 온 소위 "50억 클럽" 건에다,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정 대출 의혹 수사 무마 건을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대장동뿐 아니라 성남FC(축구단) 후원 문제, 쌍방울 그룹과 이재명의 유착 관계도 뒤지고 있다. 아무거나 하나만 걸러라 하는 식이다.

쌍방울 회장 김성태를 태국에서 체포

해 귀국시킬 때도 이재명과 김성태의 관계가 극도로 밀접한 듯한 냄새를 풍겼는데, 지금 검찰과 우파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제3자가 바뀌어져 서너 번 통화한 사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새로 지목한 혐의는 쌍방울 김성태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대선용 방북 이벤트를 위한 것이었다는데, 이것의 근거도 김성태의 달라진 진술

뿐이다. 이조차 증거인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부인하고 있다.

쌍방울 김성태가 했다는 송금의 사실 여부와 목적을 밝혀 내려면 북한 당국이 확인해 줘야 할 판이다.

아무튼 하나만 걸러라 하는 식의 수사는 한 수사가 다른 수사의 시간을 벌어 주는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 반대로 발전할까 두려워 거칠게 나오는 윤석열

반대 세력에 대한 윤석열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법치'를 내걸고 검찰·경찰을 앞세워 노동조합, 평화운동, 민주당 대표 이재명 등을 향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보수층에서 지지를 일부 회복했지만, 정치 위기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다.

지금 전기·가스 요금 폭등은 반 윤석열 정서에 다시 불을 지르고 있다. 지난해 취임 초부터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 등 생계비 위기가 터져 윤석열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윤석열은 노동개악, 연금 개악, 교육 개악을 해 한국 자본가들의

숙원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법·질서를 앞세운 강경한 억압에 더 의존하려고 한다. 국정원의 실질적인 대공수사 지휘를 유지하고, 검찰의 민간 사찰 종합 기구인 범죄정보실도 다시 키우려고 한다.

마약·민생·부패·간첩 수사 등 각종 명목으로 경찰력 강화, 민주적 권리 제약, 노동조합 압박을 정당화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 일환이다.

수사권을 이용한 공격의 맥락과 대상만 봐도 윤석열은 생계비 위기에 대한 불만과 정권 반대가 연결되는 걸 두려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김건희는 비껴가는 검찰의 칼날

일방의 진술을 진실인 양 몰아가는 여권과 검찰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모른 체한다.

최근에 대통령실이 직접 민주당 김의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가 김건희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뉴스버스〉 보도를 보면, 지난해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사가 2010년 가을 김건희 측이 주가 조작을 위한 매매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이미 2012~2013년에 이 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맡은 검사들은 다양한 명목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 온 수사·공판팀은 공중분해됐다. 이 수사팀은 대선 기간에 김건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고민했었다고 한다.

한편, 〈뉴스타파〉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김건희 관련 의혹을 꾸준히 보도해 왔는데, 최근 김건희 측이 '우리기술'이라는 다른 주가 조작 건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윤석열이 공정과 법치를 위선적으로 내세워 정치적 반대자들을 망신 주고 억누르고 있지만, 그의 법치는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기업 세금 낮추지 말고 전기·가스 요금을 낮춰라

‘난방비 폭탄’이 서민의 삶을 강타하고 있다.

1월 가스 요금이 지난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올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2월 고지서다”라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2월 가스 요금은 1월보다도 60퍼센트 이상 늘었다는 얘기가 많다.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자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퍼센트 넘게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상승을 이끄는 주범인 것이다.

이미 고금리·고물가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해 온 노동자들과 그 밖의 서민은 수십만 원이 오른 난방비 때문에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난방비 폭탄에 대한 불만이 들끓자 윤석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200만 가구에 가스 요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불충분할 뿐 아니라 지원 방안도 구멍투성이다.



기업과 부유층에 감세해 준 것만 되돌려도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미 가스 요금을 못 내 도시가스가 끊긴 가구,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 도시가스 대신 등유·연탄·LPG 등을 사용하는 가구 등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에너지 요금 지원 대상인데도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수십만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평

범한 대부분의 가구에 대한 대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올 2분기에 전기·가스 요금을 더 인상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와 친기업 언론들은 국제 연료비가 늘었으니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세계 반도체 산업이 침체에 빠지자, 매 분기 수조 원씩

이윤을 남겨 온 거대 반도체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늘려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아 온 노동자 등 서민을 위해 전기·가스 요금을 낮추자는 주장에는 극렬히 반대하면서 말이다.

전기·가스·수도·대중교통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의 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해 변경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들은 정부가 지원해, 공기업들의 적자를 메우고 노동자 등 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업과 부유층에 과세해 마련해야 한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만 되돌려도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진보 정당들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전기·가스 요금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 요금을 낮추기 위한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가스·전기 요금 인하하면 기후 위기 대처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자 야당들은 서민 지원책을 내놓으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퍼센트 이하 가구에 1인당 10만~25만 원씩, 정의당·진보당은 모든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모두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자고도 주장한다.

이런 대책들은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런 지원책들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약점도 갖고 있다. 요금 부과 후 지원 대책은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쉽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가 상시적인 지원을 늘려 필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전기·가스 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추진한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당·진보당도 (최근 입장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전기·가스 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진보당은 “서민 가스 요금 동결”을 주장했지만, 강조점은 여전히 난방비 지원에 있다. 정의당도 “무리한 가스요금 인상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최근 국제 가스 가격이 인하됐으므로 국내 가스 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애초에 가스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노동당도 정부 지원을 통한 가스요금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적지는 외교를 하며 러시아로부터 싼 값에 가스를 들여오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데 그쳤을 뿐, 난방비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들여오려 하는 일본에서도 가스 요금이 폭등한 걸 보면 이런 주장은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정의당·진보당 같은 좌파 정당들이 전기·가스 요금 인하를 적극 요구하지 않는 것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전기·가스 소비를 줄여야 하고, 그러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이런 “수요관리”의 논리에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바꾸는 것이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꿀 대안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 예컨대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이나 이유진 녹색연합연구소 부소장은 정부의 전기·가스 요금 억제 정책이 “국민을 둔감하게” 만들었다며, 에너지 요금 인하 대신 “기존 주택들의 단열 개선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전기·가스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노동자·서민이 사용량을 쉽게 줄이기는 힘들다. 난방하는 게 많지 않아서 그렇다. 고통 전가로 생계비 위기만 깊어질 뿐이다.

그리고 왜 평범한 사람들이 값싼 난방비와 단열 개선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가?

사실 대다수 노동자·서민은 자신이 어떤 에너지를 얼마만큼 소비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주택을 지을 때 단열재를 얼마나 쓸지, 난방 시스템을 무엇으로 할지, 발전소는 화력으로 지을지 풍력으로 지을

지 등이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은 모두 건설회사·발전회사·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은 뒷전으로 밀어 두고 있다.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당장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십 년 치 월급을 모아 겨우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고, 치솟는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에 한숨부터 나오는 그들더러 에너지 절약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치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들을 기후 운동으로부터 이반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윤을 지키려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을 굴복시키려면 거대한 운동이 필요하다. 그 운동은 저렴한 에너지 요금을 위한 재원 마련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비용을 부자·기업주들에게 견고 추구하고 있다.

이런 대중 운동을 위해서는 노동자·서민의 생활고 문제를 중심에 뒀야 한다.



여러 노동조합이 함께 행진한 1월 31일 파리 시위

연금 개악에 맞서는 프랑스 노동자들 한국 노동자들이 갈 길을 보여 주다

1월 31일 프랑스 전역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악 시도에 맞선 파업과 시위의 물결로 뒤덮였다. 노조 추산으로 전국에서 280만 명이 참가했다. 200만 명이 참가한 1월 19일 파업·시위보다도 규모가 더 크다.

철도를 비롯한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가했다. 지난해 10월 생계비 위기에 항의하며 파업한 정유공장 노동자도 상당수가 다시 일손을 놓았다.

연금 개악은 핵심적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이다. 마크롱 정부는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려 한다. 그리고 43년 동안 연금을 납부해야만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휴직이나 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연금 수령 연령은 더 늦춰진다. 그야말로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전형적인 복지 삭감 정책이다.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인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 연금 개악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연금 개악을 추진하는 다른 정부들도 흔히 사용하는 것이다. “기금 고갈” 운운하며 연금 개악을 준비 중인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팬데믹 기간에 평범한 프랑스인 수백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동안 프랑스 억만장자들은 자산을 막대하게

늘렸다. 2021년 프랑스 억만장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무려 235조 원에 달했는데, 이는 프랑스 전체 공공병원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다.

한국의 대기업도 윤석열 정부로부터 6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올해 의료·교육 등 공공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제 살 깎아 먹기 식인 노동계급 내 재분배가 아니라, 부자들과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연금 개악을 정당화하는 명분들은 사회의 진정한 불평등을 가리고, 그 책임자들이 면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1월 31일 시위에 참가한 유치원 교사 하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2008년 경제 위기 때 정부는 어디선가 수백조 원을 찾아와 은행

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듯이 언제나 더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은 노동계급입니다. 너무 불공정합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이미 2019년, 대규모 파업과 시위로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악을 저지한 바 있다. 2019년 12월 한 달 내내 100만 명이 넘게 참가한 시위가 지속됐고, 철도·정유·전력 등 공공 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노동자가 파업했다.

유류세 인상 등 마크롱의 정면 공격을 막아 낸 2018년 노란 조끼 운동이 이 파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노란조끼처럼 하자”는 구호가 유행했다. 1995년 이래로 가장 큰 파업이 벌어졌다. 이 저항에 밀려 마크롱 정부는 연금 개악안을 철회해야만 했다.

이번에도 프랑스 노동자들은 마크롱의 연금 공격에 대거 맞서고 있다. 일부 전력 노동자는 이른바 “로빈 후드 작전”이라고 불리는 비공인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파업은 하되, 학교, 보육원, 공공 스포츠 시설, 저소득층 가정 등에 무료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연금 개악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좌절시킨 경험이 있다. 아직까지 마크롱 정부는 후퇴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파업이 더 확대된다면 마크롱 정부를 한 발 물러서게 할 수 있다.

온건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토요일을 다음 행동의 날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평일에 일손을 놓아야 한다.

프랑스 급진 좌파들은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은 2월 6~8일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전력·정유 노동자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배자들의 공격에 단호하게 맞선다면 이를 좌절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보여 주고 있다.

윤석열도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연금 개악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프랑스처럼 하자.



“전면 철회될 때까지 총파업”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낭트대학교 학생들

영국 현지 보도

생계비 위기에 맞서 50만 명이 파업에 나서다

2월 1일은 정말 멋진 날이었다. 그날 파업의 규모와 투지는 활동가 대부분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노동자 행동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뚜렷이 보여 줬다. 노동자들은 엄청난 수로 모여 파업을 벌일 수 있고, 일단 파업에 나서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교사, 대학 노동자, 공무원, 철도 기관사 등 노동자 약 50만 명이 벌인 파업 소식이 하루 종일 언론 보도를 가득 채웠다. BBC의 한 취재 기자는 이렇게 인정했다. “파업하는 수요일? 새로운 ‘불만의 겨울’? 뭐라고 부르든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산업 행동이 벌어졌다.”

행진과 집회는 컸다. 런던에서 약 4만 명, 셰필드에서 6000명, 브리스틀과 맨체스터에서도 그 비슷한 수가, 노팅엄에서 2000명이 모였다. 결과적으로 파업 참가자 10명 중 1명 이상이 행진에 참가했다. 이들이 바로 핵심 활동가층인 것이다.

파업 노동자 중 가장 많았던 전국교육노조(NEU) 소속 교사들이 피켓라인 [파업 대체 인력 투입 저지선]과 집회에서 특히 눈에 띄었다. 한 번도 파업한 적 없던 젊은 교사들이 파업에 많이 참가해 자신감을 새로 얻었다. 교육노조와 공무원노조(PCS)의 피켓라인에서 오는 소식들을 보면, 젊은 조합원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되고 있는 듯하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정부를 향한 격한 분노와, 그에 맞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 뒤섞인 정서가 도처에서 표출됐다. 가장 우파적인 언론들도 파업 파괴자가 생겨나고 있다거나 파업에 대한 여론이 나쁘다는 조짐을 찾아낼 수 없었다.

물론 파업을 명령받지 않은 노동자들이 비공인 파업에 나서거나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기를 거부한 사례는 극히 적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시야가 자기 부문과 그 쟁의에만 협소하게 갇혀 있어서 벌어진 일이다. 파업에 참가한 현장 조합원 활동가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지만, 다음에는 이 이상이 필요하다.

투쟁의 전략에 관한 논의에서 상이한 노동자 집단들은 저마다 상이한 단계에 있다. 교사들은 이날 처음 파업에 나섰기에, 그들 사이에서는 전략이나 파업 확대에 관한 물음이 덜 제기된다. 대부분은 아직 저항이 주는 짜릿함을 만끽하고 있다.



런던 곳곳을 행진한 파업 노동자들

반면 지난 4년 동안 50일 넘게 파업을 벌인 대학노조(UCU)의 파업 노동자들은 강경하게 행동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훨씬 더 잘 안다. 다수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18일간의 파업 계획을 넘어 무기한 파업으로 수위를 높이기를 바란다.

기관사노조(ASLEF) 소속 철도 기관사들이 지난 7개월 동안 7일 파업을 벌였지만 사용자들은 아무 양보안도 내놓지 않았다. 이번주 초에 사이먼 웰러 기관사노조 사무처장은 이렇게 말했다. “안타깝게도 상황이 어느 정도 악화됐다.”

웰러 사무처장은 이렇게 전했다. “지난주에 조합원 1000명과 온라인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언제 투쟁 수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들이 나왔죠. 조합원들은 정말 화가 나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자들과 보수당에 분노하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우유부단함에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다.

공무원 노조는 오늘 파업으로 마침내 전국적 행동을 벌였다. 이전의 부문별 파업 때보다 훨씬 고무적이었다.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런던 남부의 아벨리오 버스 회사 노동자들도 유나이티드(UNITE) 공공부문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추진하던 합의안을 옹계도 거부하고 파업 중이다.

하지만 각각의 파업이 상이한 단계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가장 느린 쪽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철도 노동자들, 우체국 노동자들, 국민보건서비스(NHS) 노동자들, 교사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보수당과 사용자들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크고 더 길게

파업이 더 길어져야 하고 더 커져야 한다. 2월 1일의 파업과 같은 행동을 더 큰 규모로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개별 파업들을 더 크고 더 길게 벌이는 것이다.

활동가들은 이후에도 공동 파업을 계속해서 벌이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자기 부문의 파업 전략이 다른 부문의 투쟁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몇몇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다 함께 파업하자”라는 구호를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행동만 명령할 핑계로 삼을 위험이 있다.

노동조합 지도 관료는 정작 자기 부문의 쟁의는 숨통을 막으면서 “총파업”을 호소하는 농간을 부릴 수 있다. 오늘 집회에서 철도해운교통노조(RMT) 지도자 믹 린치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린치는 왜 4만 철도 노동자들을 불러 내지 않았을까? 게다가 철도해운교통노조는 사측이 조합원

들에게 또다시 내민 터무니없는 협상안을 검토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사측의 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확대하라고 조합원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원래 오늘 행동은 영국 노총(TUC)이 노동조합 규제법 제정을 규탄하며 잡은 것이었다. 이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았는데, 영국 노총이 그 법에 맞서거나 거스를 계획이 없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 영국 노총은 파업 투쟁이 아니라 의회에 희망을 걸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3월 15일에 또다시 공동 파업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교육노조는 이날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에서 다음 교사 파업을 벌일 것이며 그때는 이를 동안 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으로 투쟁 확대를 대신할 수는 없다. 활동가들은 승리할 기회를 잡으라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압박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활동가들은 스스로 행동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일관된 전략이 없다. 정부는 무자비하고 억압적인 파업·시위 억제법을 통과시켰지만, 이것이 사회적 분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장관들은 올해 임금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배계급의 전략은 뻔하다. 예컨대 국민보건서비스 파업처럼 지지를 매우 많이 받는 파업을 상대로는 사소한 개선택을 내놓으면서,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합의해 파업을 끝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이 전략이 노동자들의 더 많은 반격을 고무하게 될까 봐 우려한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공허한 약속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재무장관 제러미 헌트는 지난주에 한 “거창한” 연설에는 정책이랄 것도 제시하지 않았고, 의미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시늉조차도 하지 않았다.

2월 1일 파업은 영국에서 다시금 저항의 규모가 커졌다는 반가운 변화를 나타내는 사건이었다. 이 파업들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복돋는 계기가 돼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고비마다 도전에 부딪힐 것이다

지난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룰라)가 자이르 보우소나루에 맞서 거둔 승리는 전 세계 좌파에게 희망을 줬다. 가장 고약한 극우 대표자 중 하나를 패배시켜 그들의 전진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룰라 앞에는 매우 좁고 험난한 길이 놓여 있다.

룰라는 앞서 2002년과 2006년 대선에서도 노동자당(PT)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경제적 호재가 맞물렸다.

브라질은 이른바 “원자재 가격 슈퍼 사이클”의 수혜자였다. 즉, 중국의 경제 활황이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그 가격을 끌어올린 것에서 득을 봤다. 이는 브라질 경제에 퇴행적 영향을 줬다. 대두와 철광석, 소고기 등 1차 상품의 수출이 이익을 얻는 대신에 제조업이 쇠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수출품을 중국이 탐낸 덕분에 수익이 생겨났고, 룰라는 이것으로 ‘기아 제로’나 ‘보우사 패밀리 아[빈민 가구 소득 보조] 같은 빈곤 퇴치 정책의 비용을 댔다. 룰라 정부는 전반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설에 부합하는 경제 정책을 추구하면서 국민층에 부를 약간 재분배했던 것이다.

2007~2009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이러한 운신의 폭은 사라져 버렸다. 룰라의 후계자인 지우마 호세프는 호황이 끝난 것을 배경으로 일어난 준(準)쿠데타인 탄핵을 당했다. 룰라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날조된 부패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대선에서 룰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도 전체 경제 운영의 일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룰라는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집권했다.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려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브라질의 금리는 13.75퍼센트로 치솟았다.

룰라는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터무니없는 수정 헌법을 뒤집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의 재무장관 페르난두 아다지가 발표한 증세와 지출 삭감 패키지는 국민총생산(GDP)의 2.1퍼센트라는 소규모 예산 적자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신자유주의 정설로 돌아간 것이다!



사진 출처 Ricardo Stuckert/PR(룰라)

룰라의 앞길에는 개혁주의 전략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경제 위기와 극우 운동의 부상이라는 난관이 놓여 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의 통화에서 룰라는 미국 달러의 금융 지배력이 약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의 행보로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와 함께, 양국의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이 공동 통화 창설을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만능

유로화의 경험은 공동 통화가 결코 만능이 아님을 보여 준다. 게다가 새 통화가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것이 협의될지부터가 미지수다. 브라질 물가는 지난 한 해 동안 5.79퍼센트 올랐지만, 지난 12월 발표된 아르헨티나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94.8퍼센트에 달했다.

그러나 룰라가 마주한 가장 큰 난관은 정치적인 것이다. 룰라는 1퍼센트포인트대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됐다. 보우소나루는 복음주의 교회 기반을 이용해 중간계급이거나 중간계급이 되고자 열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 보우소나루는 군대와 경찰, 파시즘 내지 파시즘에 가까운 운동의 핵심 지지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들은 노동자당이 체계적으로 부패해 있고 룰라가 실제로는 선거에서 졌다고 믿는다. 투표 기간에 연방 경찰과 군부는 룰라 지지가 높은 지역에서 투표를 방해하려고 도로를 봉쇄하기도 했다. 특히, 가난한 북동부 지역에서 그랬고, 심지어 리우데자이네루에서도 그렇게 했다.

더 심각한 일은 수도 브라질리아의 보안군이 보우소나루 지지 시위대가 1월 8일 대통령궁과 의회, 대법원 건물에 난입하는 것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을 재연하는 동안 룰라는 브라질리아 밖에 있었다. 질서가 회복되자 룰라는 보안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나에게 총을 쏘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집무실을 지켜 달라고 하겠는가?”

그후 난입을 허용한 브라질리아 주정부에서 숙정이 단행됐다. 룰라는 군대 내에서 보우소나루 지지 선동을 단속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 줄리우 세자르지 아루다를 해임했다.

그러나 과거에 8년 동안 대통령을 지내면서 군을 민주화하지 못한 룰라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이제 와서 성공을 거둘 공산은 크지 않아 보인다. 룰라의 지난 임기 동안 부패가 행해진 주된 원인은 국회 소수당인 노동자당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다른 군소 정당들의 합의를 구해야 했던 데 있다.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다른 선거들을 통해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국회와 주정부에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졌다. 오직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개입만이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룰라의 시야를 넘는 급진적 요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Alex Callinicos, “Lula will be met with challenges at every turn”, (2023. 1. 30)

미 국방장관 방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긴장을 악화시킨다

1월 30~31일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위협받으면 미국이 핵무기,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개념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 공약이 철통같은 재확인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의식해 꺼낸 말이기도 하다. 즉,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할 생각하지 말고 미국의 핵우산을 계속 믿으라는 말이다.

오스틴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F-22,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확장억제 운용 연습도 실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2월 중 미국에서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한미연합훈련에서 야외 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핵공격이 가능한 미국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드나들고, 핵 선제공격 연습이 포함된 연합훈련이 강화되는 것은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이런 움직임이 반드시 북한의 반발을 부를 테니 말이다. 지난해 북한은 한·미와 한·미·일 연합훈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맞대응해 왔다.

그러나 확장억제 강화는 중국도 자극할 것이다. 한반도와 그 인근으로 오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은 결국 중국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미국 정부가



“확장억제 강화” 약속하는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왼쪽), 한반도 주변 정세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한 선택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보고서를 냈다. 그 보고서는 핵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의 한반도 주변 상시 전개, 핵무장이 가능한 미군 항공기의 한국 내 수용 시설 마련을 제안했다.

그 보고서는 미래에 미국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할 방안을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이런 제안은 무엇보다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기존 억제 정책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자체 핵무장을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는 미군 전략잠수함의 동해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냈다. 특위 내에서는 유사시 제주도에 미군 핵전력을 배치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명의 날

한미동맹의 이런 움직임은 상황이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자극할 것이다.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은 핵무기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중이다. 지난달 미국 핵과학자회보는 지구 파멸을 경고하는 ‘윤명의 날 시계’를 자정 90초 전으로 10초 앞당기며 다음과 같이 우려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험하고 새로운 ‘제3차 핵 경쟁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이 2035년에는 지금보다 5배 많은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래도 미국,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규모에는 못 미칠 것이지만 말이다.

미국은 이에 맞서 핵전력 우위를 지키려고 새로운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신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조만간 전력화하려 한다.

결국 확장억제 강화도 미·중의 제국주의 경쟁의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자연히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이 경쟁에 더 깊이 휘말리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 자체 핵무장 발언을 한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 지역의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확장억제 강화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북핵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 강화와 함께 확장억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금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면서도 확장억제를 지지한다.

〈한겨레〉는 자체 핵무장에 반대하면서도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핵 대응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확장억제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와 발언권을 확대”하라고 주장한다. 이는 아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격히 강화되는 데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은 전쟁을 궁극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 외려 주변국을 자극해 궁극적으로 위험을 더 키워 왔다.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한국의 의사가 반영될 리 만무하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이나 일본에도 그런 권한을 내준 적이 없다.

자체 핵무장이거나 확장억제 강화 모두 한반도 주변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선택일 뿐이다. 둘 다에 반대하고, 불안정의 근본 원인인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확장억제 강화도

미·중의 제국주의 경쟁의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자연히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이 경쟁에 더 깊이 휘말리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NO.” 하지 않았다

나토 사무총장,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촉구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1월 29~30일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을 거쳐 일본을 방문하는 순방 일정의 일환이다.

스톨텐베르그는 이번 방문의 목적이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칙 기반 질서’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미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자유시장 제국주의 질서를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다.

스톨텐베르그가 언급한 “공동의 위협에 맞선 대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금 나토가 공들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다.

스톨텐베르그는 “한국이 군사적(무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요구했다. 최근 독일의 레오파르트2 탱크 지원 결정을 염두에 두고 “나토 동맹 중에도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선회한 전례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한국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스톨텐베르그에게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능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응답했고, 국방장관 이종섭 역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런 지원에는 나토군 표준 규격과 같은 포탄·연료를 사용하는 한국군 주력 전차 ‘K-2 흑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미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무기 지



한국 주력 전차 K-2 흑표

원·수출을 확대해, 빠르게 소모되고 있는 서방의 무기 재고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사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로 자주포 등을 대량 수출하는 ‘역대급’ 군수 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지원·수출한 한국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들어가고 있다는 보도들이 여러 번 나온 바 있다.(관련 기사: 본지 449호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한국 윤석열 정부’)

향후 이어질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무기 지원 포함)에 반대하고, 러시아군 철군을 요구하면서도 나토의 확전에도 반대하는 운동이 절실히 해지고 있다.

대중(對中) 동맹 강화

한편, 스톨텐베르그의 방한은 중국에 맞선 동맹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기

도 하다. 이미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을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체계적 도전자”로 규정한 바 있다.

스톨텐베르그가 이번 방한에서 “세계적 교역과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의 세계적 위협과 도전에 맞서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그 협력의 실제 내용은 무엇인가? 스톨텐베르그가 주로 거론한 것은 한국-나토 간 “사이버[첩보·정보전] 협력 강화”, “군비 관련 공조 강화” 등이다.

스톨텐베르그가 한반도에서 ‘확장억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의 연장선이다.

스톨텐베르그는 “미국에 의한 이른바 ‘확장억제’는 오랫동안 잘 작동해 왔고, 이것이 억지력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한반도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방

어 능력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빌미로 삼지만 실제로는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다.(관련 기사 7면을 보시오.)

그뿐 아니라, 스톨텐베르그는 이번 방한 후 일본으로 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 결정에도 지지를 표명했다. 일본의 이 결정이 대만해협 긴장과 남·동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을 겨냥한 것임은 익히 알려진 바다.(관련 기사: 본지 422호 ‘일본, 방위비 지출을 미·중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린다’)

이처럼 스톨텐베르그는 동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의 무장 강화에 힘을 실어주고, 그 국가들과 나토의 공조를 강화해, 장차 나토의 역량을 아시아에 투사할 발판을 닦으려 한다.

이런 행보는 아시아의 긴장을 더 첨예하게 만들 것이다. 이미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스톨텐베르그의 방한·방일이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의 친미 동맹국들 사이의 연계 강화를 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평화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 일”이라고 불평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의식하긴 하겠지만, 나토와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윤석열은 30일에 스톨텐베르그와 만나 “작년 11월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가 개설됐고, 이를 통해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 전날 외교부 장관 박진도 올해 4월 개최될 나토 외교장관 회의의 참가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적 쟁투에 더 깊숙이 연루되는 길이다. 두 지역의 갈등과, 그 갈등의 원천인 제국주의 체제에 맞선 투쟁이 절실히 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러시아군 철군! 나토 확전 반대! 윤석열 정부 무기 지원 반대!

2월 25일(토) 오후 3시
서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인근 (5호선 광화문역 4번 출구, 광화문타워 앞)
※ 집회 후 을지로-시청으로 행진 문의 010-7550-2131

온라인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 1년** 확전으로 가나? 평화를 위한 대안은?

2월 8일(수) 오후 8시
발제 **이원웅**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각축전> 공저자

bit.ly/0208-meeting

다음 온라인 토론회

마약과의 전쟁
- 성공할 수 있을까?

2월 15일(수) 오후 8시
발제: 장호중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0215-meeting